만원버스까지 방화…잇단 '묻지마 범죄' 불안

여수 방화범 3년전 형집 불지르려다 검거…출소 한달만에 또 범행

창원·진주선 정신질환자 연쇄 방화…범죄 예방 대책 마련 시급

"운전기사가 버스 문을 열지 않았다면, 만약 아이들이 탄 유치원 버스였더라면…"

'묻지마 범죄'가 도를 넘었다. 길가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던 묻지마 범죄가 급기야 퇴근길 만원 시내버스 방화로까지 번졌다.

여수 시내버스 방화 사건을 계기로 묻지마 범죄에 대한 형벌 강화와 버스 화재 대책에 대한 긴급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수경찰은 7일 시내버스에 올라 불을 지른 혐의(현존자동차방화치상)로 문모(6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33분께 여수시청 교통관제센터 앞 버스정류소에 멈춰서 있던 승객 40여명이 탑승한 시내버스에 올라 불을 지른 혐의다.

문씨는 정류장 인근 페인트가게에서 18ℓ들이 시너 2통을 구입해 정차 중인 시내버스에 올라탔다. 곧바로 운전석 뒤편에 시너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은 시내버스 내부를 모두 태운 뒤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10여분만에 진화됐다.

승객 40여명은 운전기사 임모(48)씨가 신속하게 뒷문을 열어 무사히 대피했다. 대피 과정에서 다리를 접지르는 등 3명이 다쳤고, 1명은 유독가스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문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 배분에 불만을 품고 시내버스에 방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는 경찰에서 "(자신 소유의) 토지 3000~4000평을 국가에서 수용하고 보상을 해주지 않아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문씨는 또 "내 불만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어 지켜보는 사람이 많고 승객이 많은 퇴근길 만원버스에 일부러 불을 냈다. 이러면 관심을 끌어 모두가 내 문제에 관심을 둘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는 3년전에도 이 문제로 여수시 자신의 친형 집에 불을 지르려다 방화미수로 검거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 1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씨는 출소한 뒤 경기 안성에서 별다른 직업 없이 혼자 살다가 최근 고향인 여수로 내려왔다.

경남 창원과 진주에서도 6일 정신질환 전력이 있는 고모(여·41)씨가 4차례에 걸쳐 '묻지마 방화'를 저질렀다. 고씨는 식당 입구에 있는 쓰레기와 아파트 경비실 옆에 있는 폐지 등에 불을 붙였다.

아무런 이해 관계가 없는 시민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한 여수 시내버스 방화 사건을 계기로 '묻지마 범죄'에 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이들의 불만을 품을 수 있는 사회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 경찰대 교수는 "방화범은 재범의 위험성 높아 관리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실에서는 경찰이 동향 파악만 할 수 있을뿐 사고 예방 및 관리 권한이 없어 재범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문씨는 사회의 이목을 끌기 위해 방화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 같다"며 "이들의 불만을 들어주는 소통창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 무면허 카셰어링 사고 4년간 41건

스마트폰 앱으로 쉽게 빌려

20세이하 사고 매년 증가세

최근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을 예약하고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주차장에서 차를 빌린 후 반납하는 제도인 '카셰어링'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5일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에서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통해 차를 빌린 A(17)군이 사고를 낸 후 스스로 투신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광주일보 2월 7일자 6면>

카셰어링 서비스는 기존 렌터카 서비스와는 달리 스마트폰 앱에 부모 등 제 3자의 운전면허정보만 입력하고 결제하면 차량 인수와 반납시에 본인 확인절차나 대면접촉을 할 필요가 없어 미성년자들도 손쉽게 차를 빌릴 수 있다. 이로 인한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렌터카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 이전인 2010년 전국에서 발생한 20세 이하의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58건이었으며 2011년에는 59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카셰어링이 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2012년에는 94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2013년 86건, 2014년 78건, 2015년 85건으로 집계돼 꾸준히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경우 20세 이하의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2012년 15건, 2013년 6건, 2014년 4건, 2015년 16건으로 나타났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빨리 피하세요"…뒷문 열고 승객 대피시킨 후 하차

버스기사 침착한 대응…대형참사 막았다

버스 탑승 시청 직원도 진화 도와

버스기사 임정수(48·사진)씨는 하루가 지났지만 어제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쿵쾅거린다. 지난 6일 오후 6시33분께 여수시청 교통정보관제센터 앞 정류장에서 불이 난 시내버스 기사 임씨는 사고의 아찔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버스에 승차한 문모(69)씨가 보자기에 감싼 시너 2통을 갑자기 꺼내 운전석 뒤편에 뿌리고는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그 순간 버스는 아수라장이 됐고 "아저씨 뭐 하세요!"라는 외침에 뒤를 돌아본 임씨는 "불이야"라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재빨리 버스 뒷문을 열었다.

당시 임씨는 "무조건 승객들을 우선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평소에도 1달에 한 번씩 안전교육을 받아 승객들을 대피시키는 것이 몸에 익은 탓에 당황하지 않고 승객을 대피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임씨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퇴근길에 40여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만원버스의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날 사고가 참사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데는 여수시청 체육지원과 남경현(여·32) 주무관의 빠른 판단도 한 몫을 했다.

이날 퇴근 후 방화범 문씨에 앞서 먼저 버스에 탑승한 남씨는 버스에 불이 붙자 바로 뒷문을 이용해 여수시청 교통과로 달려가 도움을 청했고, 시청 공무원들이 소화기를 이용해 재빨리 진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몇 분 뒤 소방차가 도착했고 10여분 만에 완전 진화가 됐다.

남씨는 "너무 급해 119에 신고할 생각도 못했고, 공공기관은 사무실마다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순간 떠올라 바로 달려가 도움을 구했다"면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어 정말 다행이다"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연기 흡입 시민 구조 이렇게 7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신세계 이마트 1층 매장에서 열린 '재난대비 합동훈련'에서 광주 서부소방서대원들이 연기를 흡입한 매장 직원을 구조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이마트와 광주 서부소방서, 서부경찰서가 함께 실시한 이번 훈련에서는 매장 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화재 진압 관련 시설물의 보수·점검 및 화재대피훈련 등이 진행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법원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 취소하라"

"원안위 적법한 심의·의결 안돼"

경북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7일 원전 근처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허가사항에 대해 원안위 과장이 전결로 처리하는 등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안위법)상 위원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운영변경 허가를 심의·의결하는 데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자력안전법령에는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 과정에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월성 2호기 설계기준으로 적용한 바 있는 캐나다의 최신 기술기준을 1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에 적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위법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연장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일부 승소 판결의 취지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전체 원고 중 원전부지 80㎞ 바깥에 거주하는 이들이 제기한 소송은 원고 자격이 없어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월성 1호기 근처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 총 2167명은 월성 1호기의 설계수명 기간 30년 만료를 앞두고 추가 10년 동안 수명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 이용부 보성군수 영장 기각

뇌물수수 혐의로 청구된 이용부 보성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이준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이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에 관해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가 상당부분 확보되어 있어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며,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일 사택 신축용지를 헐값에 사들이고 건축비를 시가보다 낮게 산정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이용부 보성군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의약계 리베이트' 병원장 2명 영장 신청

광주경찰 돈 받은 정황 포착…수첩 언급 5곳도 조사

'의약계 불법 리베이트'를 수사 중인 경찰이 광주지역 병원장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약품 구매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광주지역 병원장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9일 약품 도매업체 A사로부터 확보한 리베이트 수첩에 언급된 광주·전남지역 병원 8곳 중 2곳의 병원장이다. 경찰은 2곳의 병원장이 약품 도매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병원 6곳 중 병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W병원을 제외한 5곳에 대해서도 혐의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광주의 한 병원으로부터 세무신고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남지역 모 세무서 간부공무원을 구속했다. 또 세무신고와 관련 세무사 B씨를 입건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술집서 옆 테이블 여성들에 다가가 바지 내리고 '만취 소란'

쌍나팔

○…술집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의 여성들에게 작업을 걸며 바지를 내리고 소란을 피운 20대가 경찰서행.

○…7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 조리사 박모(27)씨는 이날 새벽 0시55분께 광주시 북구 문흥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의 여성 손님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며 자신의 바지를 벗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

○…경찰은 "박씨가 술을 마시러 와서는 만취해 다른 여자들에게 작업을 걸면서 바지를 내렸고, 그 때문에 다른 손님들도 다 나가버렸다"는 술집주인 김모(28)씨의 증언에 따라 박씨를 불러 소란을 피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

/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6계>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6타경 3896	1	광산구 수등로287, 107동 3층 301호 [신창동,신가부영아파트] 84.9873㎡	아파트	198,000,000 198,000,000	
2016타경 16632	1	북구 두암동 329 반석힐라 101동 4층 410호 31.77㎡	아파트	78,000,000 78,000,000	2016타경21160[중복]
2016타경 16748	1	서구 천변좌하로548번길15-19, 에이동 3층 305호 [광천동,남일아파트] 59.41㎡	아파트	67,000,000 67,000,000	
[대지/임야/전답]					
2016타경 14780	1	화순군 동면 복암리 459-23 31305㎡ 제시외 수목 밤나무	과수원	486,750,000 486,750,000	수목포함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6타경 16502	1	화순군 이양면 강성리 산53-4 102474㎡[구근만지분59506/102474전부.지분매각]	임야	65,456,600 65,456,600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2016타경 19518	1	광산구 장수동 산72-3 5088㎡[분묘2기소재]	임야	210,860,000 210,860,000	일괄매각.지분매각.전양복1/2전부.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동소 산72-7 4954㎡[일부저수지부지로이용중]	임야		
		동소 산72-18 868㎡	임야		
	2	동소 227 235㎡	전	185,042,500 185,042,500	
		동소 256 489㎡	답		
		동소 256-1 3138㎡[수목은매각대상에서제외][물건번호2:매각제외콘테이너1동소재]	전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6타경 14377	1	남구 주월동 969-20 165.3㎡	대	141,065,55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남구 회재로1224번길 19-1 1층85.195㎡ 제시외 창고 5.7㎡	근린시설	141,065,550	
[자동차,중기]					
2016타경 16137	1	사용본거지:전남 화순군 화순읍 진각로 181-16[교리] 등록번호:47보5646 차명:에쿠스[EQUUS] 연식:2015	자동차	46,000,000 46,000,000	보관장소:광산구 산정동156현대주차장
2016타경 65610	1	사용본거지:청주시 흥덕구 복대로200번길 32 201호[복대동] 등록번호:16아9305 차명:Juke 연식:2014	자동차	17,000,000 17,000,000	보관장소:광산구 산정동156현대주차장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7. 2. 22. [수]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7. 2. 28. [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7. 2. 8.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선주태